

새누리 경선률 ‘強대强’ 대치…점점 찾을까

당 지도부 경선관리위 출범 강행 非朴 주자들 반발

親朴, 지역 순회경선·선거인단 확대 등 절충안 고민

새누리당 친박(親朴·친박근혜)과 비박(非朴·비박근혜) 측이 경선 룰을 놓고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경선 무산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친박 성향의 당 지도부는 비박 측의 반발을 무릅쓰고 경선관리위원회 출범을 강행함으로써 기존 경선 룰 고수 입장은 분명히 밝혔지만, 비박 주자들은 연일 경선불참 가능성을 염두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비박 주자들은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측근들은 “분당을 촉발하려는 게 아니냐”는 등 거칠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로 박근혜 전 대표와 현 지도부를 비난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박심’(朴心)의 집행기구가 돼 있다”면서

“박심을 살피고 박심대로 밀어붙이려면 경선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상태에서 경선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도 전날 TV조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의 경선관리위 출범 강행에 대해 “(비박 주자들이) 가만 있든지 나가든지 택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바둑을 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봉준 전 대표 역시 현행 경선 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세 사람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경선에 불참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로, 조만간 개별 또는 3자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역시 강경하기는 마찬가지다.

친박 핵심 의원은 “지금 와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라면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실익이 없고 문제도 많다.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 현행 경선 룰대로 경선을 진행하면서 비박 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중재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비박계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무제한 숫자를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인원수를 어느 정도 확대하되, 제한을 두는 절충안을 다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울림과 기간에 경선을 치르는 것은 좋지 않

다”며 새누리당 대선 경선 시기를 늦출 것을 주장했다.

완전국민참여경선제 도입에 부정적이던 당 지도부와 친박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타협안에 대한 언급이 하나둘 썩 나오는 모습이다. 당 일각에서는 황우여 대표가 조만간 별도의 중재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이한구 원내대표도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 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히 임 전 실장이 주장한 선거인단 숫자 확대나 순회경선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경선관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친박 측은 지역별 순회경선을 실시하고 선거인단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친박 일각에선 21만명 규모의 선거인단 규모를 100만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모임 초청 간담회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민주당 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안철수 보다 내가 우위”

17일 대선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오는 17일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

문 고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개혁모임 간담회에 참석,

“제가 나서야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고심 끝에 정치 참여를 결정했다”며 “17일경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

로 당선됐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민심을 볼 때 제가 정권교체와 정치 교체, 두 가지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당내 후보가 아닌가 싶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고문은 안철수 서울 대 응집과학대학원장과 관련,

“제가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은 민주적 정당, 전통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막연한 지지이지만 민주당의 힘이 뭉쳐진다면 지금과 비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당대표 경선에

서 느꼈는데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 프레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친노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비판들을 겪어야 받아들이고,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6·9전대 ‘이중투표’ 논란

일부 유권자 모바일 이어 현장 투표도…공정성 시비

민주통합당 6·9 전당대회에서 일

부 유권자가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

를 모두 한 사설이 드러나 논란이 예

상된다.

민주통합당 등에 따르면 당원 A씨

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당

비당원 당원) 자격으로 모바일투표

에 참여했다.

A씨는 이어 9일에는 일산 킨텍스

전당대회 현장에서는 당에서 새로 도

입한 정책대의원 자격으로 또 다시 한

표를 행사했다. 한마디로 이중투표를

한 것이다.

이번 전대에서는 대의원투표가 30%, 권리당원과 당원, 시민선거인

단의 모바일 및 현장투표가 70% 반

영됐는데, 정책대의원은 권리당원을

겸할 수 없다.

논란이 불거자 당은 급히 기자회

견을 열었다.

강정구 사무부총장은 “각 조직에

서 정책대의원 신청자를 보내면 이를

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같이 넣

어 중복자를 가려냈다”며 “A씨는 주

민번호 끝에 두자리가 다르게 기재돼

중복자로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

했다. 그는 “본인이 두번 투표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그럴 확률이 있다”

며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사례가 발

견된 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중투표 논란이 단순한

실무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이중투표

를 한 유권자가 A씨 한명이라는 보장

이 없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

망이다.

/이중투표자 golee@kwangju.co.kr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증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전남영암 하누리병원 경매물건

■ 사건번호 : 2010타경 19601(물건번호 1)

■ 입찰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1호 법정

■ 법원최초 법사가 : 9,518,275,000원

■ 부동산위치 :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42-7와 1필지

(전남방직 입구대로변으로 접근성이 용이)

■ 물건종별 : 의료시설

■ 토지면적 : 9,517 m²

■ 건물면적 : 7,305.36 m² (지하 1층, 지상 3층)

■ 입찰진행내용

구 분	입찰기일	최저경매가격	결 과
1 차	2012. 04. 30	9,518,275,000원	유찰
2 차	2012. 06. 11	6,662,793,000원	
3 차	2012. 07. 23	5,330,234,000원	

■ 2010년 신축건물 상태 매우 양호



문의 :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강훈열 국장 H.P : 010-2498-0420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mmail.net